

정부, 신종플루 과잉 경계령 해제

지자체 가을축제 살아나나

충장축제 등 광주·전남 20여행사 재추진될 듯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의 취소·연기를 '강권'했던 정부가 열흘 만에 기준을 바꿔 11일부터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12일 개막 예정이었던 '제3회 흑산 홍어축제'를 연기한 신안군은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급작스럽게 행사를 취소·연기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인원 1천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 뿐 아니라 모든 행사·축제에 준용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줄잡아 20여개에 달하는 행사를 취소·연기한 광주·전남 지자체는 축제·행사의 연기·취소방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단 행사의 개최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4일께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어서 일부 행사 개최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세계광엑스포(10월9일~11월5일)의 연기를 비롯, 디자인비엔날레(9월18

일~10월11일), 김치문화축제(10월23일~11월1일)를 축소 개최기로 한 바 있다.

제6회 충장축제,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9월23~27일)을 각각 취소키로 했던 광주시 동구청과 남구청도 행사의 재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 내 지자체들도 행사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검토 대상은 광양 전어축제를 비롯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순천만 갈대 축제 ▲지리산 피아골 단풍 축제 ▲보성 소리 축제 등이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12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3회 흑산 홍어축제'를 연기한 신안군은 행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심 끝에 행사 취소·연기 결정을 했던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행사를 원래대로 치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기존 정부방침으로 축제·행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관람수요의 급감이 예상돼 행사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행사를 재추진하는 데 최소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예산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는 바람에 고심 끝에 행사를 취소·연기한 지자체들이 신인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연인원 1천명 이상 참석, 이를 이상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에 발송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그는 가을

11일 장성 삼서면 유평리 탐프루트 사과 재배단지 내 관음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근업씨 부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출하할 홍로 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직선제 폐지 의결

전국 대학 가운데 선구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던 조선대학교가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1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참석 이사 7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인은 10월 말까지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총장 선출방식을 정하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선출방식으로는 총장 추대·선출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 선출하거나 의

부인사를 초빙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총장선거 참여를 요구하면서 임시이사 체제 법인의 결정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조선대는 1992년 9대 정병휴 총장 이후 현 13대 전호중 총장까지 4년마다 투표로 총장을 선출했으며 지난 선거에는 교수·학생·직원에 차등적으로 비율을 적용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었다. /채희종기자 chae@



도시 일반도로 최고속도 50km로 낮춘다

경찰청 내년부터 시행 '30km 존' 구간도 확대

내년에 지방부터 도시의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80km에서 50km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존(Zone)30' 구간이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국제기준에 맞는 50km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도시 중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지역을 선정,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로 조정해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30km까지 줄이는 '존30' 구간 지역이 확대된다.

존30 구간은 현재 일산 장항동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예산을 확보

하는 대로 추가 시범구역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해 현재 수준의 최고속도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특히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4분

의 3은 주택가 등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강변북로~자유로, 동부간선도로 응봉교~성남시계 등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서울은 80km, 경기도는 90km로 서로 다른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들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속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조사해 한쪽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같게 맞출 예정이다. /연합뉴스

